

6

통 일 충 시

北韓의 主體思想

尹 炳 益 (統一研修院 教授)

통일연구소

차 례

1. 序 言 — 共產主義의 生成과 終焉 — 3
2. 「主體思想」의 形成과 展開過程 12
 - 가. 「主體」問題의 提起 (1955년) 12
 - 나. 「金日成 抗日빨치산 鬪爭」 時期로 遡及 (1930년)..... 20
 - 다. 「金日成主義化」 試圖 26
3. 「主體思想」의 理論體系 40
 - 가. 基本理論..... 40
 - 나. 社會政治的 生命體論..... 53
 - 다. 社會主義 必勝論..... 59
 - 라. 民族大團結論..... 63
4. 「主體思想」의 役割과 限界 68
 - 가. 金日成·金正日 獨裁世襲體制 71
 - 나. 自立的 社會主義 民族經濟 建設 75
 - 다. 自主外交..... 79
 - 라. 「南朝鮮」革命 82
5. 結 言 — 民族統一과 關聯하여 — 87

1. 序 言－共產主義의 生成과 終焉

미국의 碩學 브레진스키 교수는 「大失敗-20세기에 있어서 공산주의의 생성과 종언-」에서 볼셰비키혁명 100주년이 되는 2017년이 되면 모스크바 크레믈린광장 지하에는 ‘공산주의 역사박물관’이 들어설 것이라고 공산주의의 종언을 예언하였지만, 그보다 26년 앞서 1991년 8월 19일 발생한 페레스트로이카-개혁-, 글라스노스트-개방-정책에 반기를 든 보수, 반동 쿠데타가 역전됨으로써 소련의 74년 공산당통치는 終幕을 곱하였다.

되돌아보면 소련에서의 볼셰비키혁명은 인류문명사를 두갈래로 갈라 놓았으나, 74년 소련공산통치의 종막은 결국 인류문명사를 한갈래로 합치는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다.

초기 西歐 자본주의사회의 사회적모순(노동자의 비참한 생활 등)을 극복하여 ‘계급의 착취’가 없는 이상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출범한 마르크스주의는 ‘유물사관에 입각한 역사발전 5단계설에

따라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사회적모순이 극대화되어 필연적으로 사회주의혁명이 발생한다'는 기본가설이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현실화되지 않음으로써, 사실 처음부터 역사해석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이론적허구에 지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인류의 역사를 “階級鬪爭의 歷史”로만 흑백논리식으로 본 것이 원천적으로 오류였다. 이런 의미에서 젊은 날의 마르크스사상은 옳았다는 이른바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의 생각도 잘못된 것이다.

여하튼 선진자본주의사회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사회주의혁명을 후진帝政러시아사회에서 실현시키기 위하여 레닌은 「職業革命家에 의한 暴力革命論」을 개발하여 볼셰비키혁명을 성취시킴으로써 공산주의는 출발에서부터 폭력과 숙명적인 결합을 하였다. 이같은 공산주의의 폭력적 속성은 스탈린통치시기에 절정을 이루었다. 원래 공산주의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共産黨宣言」(1848)이 상징적으로 대변하듯이, 超民族國家的·國際主義的 理念이었으나 스탈린은 “소련공

산주의가 서구 자본주의에 의하여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계공산혁명에 앞서 소련을 혁명기지화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一國社會主義論」에 따라 국가권력의 극대화-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완전 박탈-를 정당화시켜 노동력을 무자비하게 동원, 단시일내에 경제와 군사력건설을 기도함으로써 결국 통치기간중 2,000~4,000만명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은 전체주의적 폭력정권으로 전락되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공산당 1당독재-정치-, 중앙집중적 계획경제 그리고 사회와 정보의 전면 통제로 노동력을 무자비하게 동원함으로써 경제건설의 초기단계에서는 실적을 올렸으나, 이러한 스탈린식 공산주의 경제건설방식은 ‘人民大衆’에게 잠재화 되어 있는 무한한 창조력을 말살하고 경쟁을 통한 발전원리를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모든 경제요소에 대한 중앙집중적 계획과 통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으로써, 결국 ‘體制的 限界性’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1953년 스탈린 사망후 권력 투쟁을 거쳐 집권한 흐루시초프는 1956년 소련공산당 제 20차 당대회를 계기로 「平和共存論」을 제기하면서 스탈린격하운동을 전개,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브레즈네프집권시기를 거치면서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리하여 안드로포프, 체르넨코 統治를 거쳐 오랜 진통끝에 1985년 고르바초프 執權으로 페레스트로이카-개혁-, 글라스노스트-개방-정책이 본격화 되었으나 기득권상실을 거부하는 「노멘크라트라」의 반발, 연방구성국의 분리 독립요구 그리고 70여년간 공산주의가 체질화 된 소련인민의 改革·開放에의 부적응 등으로 혼란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1991년 8월 19일 개혁·개방을 거부하는 보수·반동 쿠데타가 발생하였다. 역사는 假定이 없다지만 만일 이 쿠데타가 성공하였을 경우를 생각하면 현기증이 난다. 국제정치는 동·서냉전체제로 복귀하였을 것이며 이에 고무된 북한의 對南戰略이 더욱 硬化됨으로써 한반도의 통일정세는 극도로 악화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엘친과 같은 용감한 반쿠데타 지도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 추진과정의 혼란속에서도 내면적으로 꾸준히 성장된 ‘民主市民勢力’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쿠데타가 분쇄됨으로써, 그 반작용으로 마침내 74년의 공산당통치가 종막을 고하고 1991년말 소연방이 해체되는 인류역사상 혁명적 사태가 전개되었다. 쿠데타 분쇄 이후 급속도로 와해된 소연방체제를 獨立國家聯合으로나마 회생시키는 어려운 과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동서냉전체제하에서와 같은 소련의 국제정치적 역할은 종막을 고하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모색되어가고 있다.

이같이 ‘共產宗主國格’인 소련에서 공산통치가 종막을 고하고 이보다 앞서 동구공산체제가 붕괴됨으로써 아시아공산주의만이 끝까지 버티고 있으나, 아시아공산주의 운명은 중국공산주의 운명과 직결될 것이다.

모택동사상과 등소평의 실용주의노선으로 압축되는 ‘中國共產主義’는 사실 중국문화에 뿌리박은 공산주의이다. 1956년 제20차 소련공산당대회를 계기로 흐루시초프가 평화공존론을 제기하자

이를 ‘修正主義’라고 비난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정통을 계승한다고 주장한 모택동사상은 노동자를 혁명의 「主力軍」으로 설정한 마르크스·레닌주의와는 달리 농민을 「主力軍」으로 설정한 중국적 공산주의였으며, 「黑猫白猫論」을 내건 등소평의 실용주의노선도 중국적인 것이다. 오늘날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경제특구」가 상징하듯 對外開放經濟政策을 추진하고,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이 상징하듯 공산경제체제를 개혁하면서도 정치적 민주화만은 단호히 거부하고 있으며, 소련공산통치 붕괴 이후 중국지도부는 단연 긴장하여 「軍의 국유화」-군은 당의 군대임- 「정치의 민주화」, 「경제의 시장화」 그리고 「계급의 자유화」 등 이른바 「4화」를 반대하며 체제강화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1978년 개혁·개방정책 채택후 이미 상당히 진행된 역사를 後退시킬 수 없을 것이다. 개혁·개방정책 후 이미 10수년이 지난 중국경제는 태평양지역경제를 중심으로 세계경제와 밀착되어 떨어져 생존할 수 없게 되었으며, 개혁·개

방과정에서 경제발전이 진행되면 될수록 - 마치 中産層의 형성과 더불어 西歐 民主主義가 태동하였듯이-중국인민의 정치적 민주화요구는 상대적으로 팽창될 것이다. 1989년 「6·4 천안문사태」때와 같이 중국당국은 인민의 민주화열기를 탱크로 영원히 짓밟을 수는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西歐先進諸國은 소련공산통치 붕괴후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는 중국공산주의를 방치할 수 없을 것이다.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는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원활히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중국의 정치적 민주화는 필수불가결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공산주의는 개혁·개방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이미 붕괴되었거나, 붕괴될 운명에 직면하였으나, ‘조선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를 호언장담하면서 개혁·개방정책으로부터 아직은 동떨어진 死角地帶가 있는 바, 그것이 바로 북한 공산주의이다.

「神政體制」(theocracy)로도 표현되는 오늘의 북한공산주의가 형성되기까지는 그 나름대로 파란만장의 우여곡절이 없을 수 없었다.

帝政러시아 이래 不凍港을 얻기 위하여 南下政策을 추진해 온 소련은 제 2 차 세계대전 종전후 38도선 이북의 한반도 지역에 군정을 실시하면서 金日成을 앞세워 조직적인 소비에트化 政策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日帝植民統治로부터 곧바로 共產統治로 이어진 북한지역에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성장할 여지는 전혀 없었다.

한편, 1948년 9월 9일 북한정권 수립후의 북한정치사는 한마디로 김일성 독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무자비한 肅清史였다. 이같이 소련軍政과 肅清過程을 거치면서 북한인민은 金日成 독재체제에 철저히 馴致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북한정권은 金日成 神政體制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른바 「金日成 抗日빨치산 鬪爭史」를 조작하였다. 「조선전사」 33권 중 16권 이하 「현대편」을 ‘김일성 家系史’와 ‘항일빨치산 투쟁사’로 완전히 분장시켰다. 金日成은 「東北抗日聯軍」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1941년초 蘇領 하바로브스크 地域으로 탈출하여 蘇軍 88특별여단의 대대장으로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조선인민혁명군」

을 조직하여 日帝를 물리치고 민족해방을 성취시킨 전설적 영웅으로 각색되었다.

이러한 「抗日빨치산 鬪爭史」의 조작에 이어 1970년대부터 金日成 神政體制 구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主體思想」이다. 즉, 「主體思想」은 김일성 神政體制를 뒷받침하고 있는 ‘統治이데올로기’이다.

「知彼知己면 百戰不殆」라는 孫子兵法을 상기할 필요도 없이 다가오고 있는 민족통일을 主導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통일역량을 착실히 결집함과 더불어 북한체제의 實體를 정확히 알아야 하며,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의식과 행동을 완전히 지배하기 위한 준거 틀인 「主體思想」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反共이데올로기 敎育은 유물변증법, 유물사관, 폭력혁명론, 전위당론, 국가소멸론, 노동가치설, 잉여가치설, 제국주의론 등 주로 古典공산주의이론 비판敎育에 치중된 감이 있으나, 東西冷戰體制가 와해되고 공산주의의 개혁·개방정책이 체제붕괴로까지 발전되고

있는 오늘의 국제정치적 현실에서 우리 체제에 대한 排戰은 보편적인 공산주의로부터의 도전이 아니라 人間主義와 民族主義의 탈을 쓴 「主體思想」으로부터의 도전이다. 이른바 「主思派」의 활동이 가열화되어가는 國內政局의 현실이 이를 응변으로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주체사상」의 형성과 전개과정, (2)「주체사상」의 이론체계 (3)「주체사상」의 역할과 한계성 등으로 항목을 나누어 「主體思想」의 이데올로기적 실체를 밝히고자 한다.

2. 「主體思想」의 形成과 展開過程

가. 「主體」問題의 提起 (1955년)

북한공산정권은 제 2 차 세계대전후 소련의 對 極東政策에 따른 소련의 「위성정권」이었으며 따라서 소련판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통치이념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소련판 마르크스·레닌

주의는 러시아의 사회주의혁명과 그 후의 국가 건설과정에서 변질된 「스탈린주의」였다. 그것은 공산당-노동당-1당독재, 중앙집중적 계획경제와 중공업 우선정책, 사회의 인적·물적자원의 총동원, 농업의 강제적 집단화, 전산업의 국유화, 유일지도자의 신격화·우상화를 기본내용으로 하였다. 김일성은 蘇軍政과 194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수립후 이러한 「스탈린주의」를 북한 땅에 그대로 이식시킨 「작은 스탈린」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작은 스탈린」格인 金日成이 「주체」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은 1955년 12월 28일 당 선전·선동일꾼모임에서 행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란 연설에서 였다.

“내가 언제인가 인민군휴양소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는 씨비리초원-시베리아초원-의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인민학교에 가보니 사진을 걸었는데 마야콥스끼, 뿌슈킨 등 전부 외국사람들 뿐이고 조선사람이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다른 나라의 혁명도 아닌 바로 조선의 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사를 알아야 하며 조선의 지리를 알아야 하며 조선인민의 풍속을 알아야 합니다. 그 래야 그 인민들의 구미에 맞도록 교양할 수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향토와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혁명투쟁에 있어서나 건설사업에 있어서나 맑스-레닌주의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면서 그것을 우리나라의 구체적 조건, 우리의 민족적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 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맑스-레닌주의는 매개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 될 때 비로소 그 불패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공산주의자들은 마치 민족적 전통을 무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남조선 청년들을 쟁취할 수 없습니다.남북조선정당, 사회단체들의 연석회의가 열렸던 1948년 당시 우리는 북반부에서 그리 크게 해놓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리승만과 김성수를 제

외하고는 우익인사들까지도 다 우리에게로 왔습니다.……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잘하고 남반부에 대한 정치사업을 잘 하여 남반부 인민들이 미제국주의와 리승만통치제도를 반대하여 일어설 때 우리나라의 평화적 통일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상 연설문 중 중요대목을 예시해 보았지만 당시 「主體」문제의 제기는 對內政策面에서 이른바 反宗派鬭爭으로 金日成獨裁體制의 확립, 혁명과 건설의 주체란 명분하에 노동력 동원, 對外政策面에서 소련의 정치적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는 獨自路線의 추구, 그리고 對南政策面에서 「人民民主主義革命力量」의 강화를 통한 이른바 ‘평화적 조국통일’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주체」문제의 제기와 숙청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김일성연설은 박창옥, 허가이, 박헌영 등을 혹독히 비판하고 있다. 특히 1955년 12월 28일은 남로당의 거물이었던 朴憲永을 美帝의 고용 간첩으로 몰아 처형시킨 지(1955년 12월 15일)2

주일째 되는 날이다. 북한최고재판소는 1953년 8월 6일 이승엽 등 남로당파 12명을 美帝고용간첩 혐의를 씌워 숙청한데 이어, 次帥 최용건을 재판장으로 최고재판소의 특별재판을 열어 마침내 남로당거물 朴憲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北侵戰爭을 감행하면서 간첩 리승엽, 리강국, 조일명, 립화도당을 고용하여 남반부에서의 정의로운 반항투쟁을 진압하고 당과 민주역량을 와해·괴멸하였으며, 다시 그들을 공화국북반부에 파송하여 당과 정부내에 깊이 잠입시켜 군사, 정치, 경제, 문화에 관한 중요기밀을 탐색·첩보하는 간첩범행을 수행하게 하였고…나중에는 적군의 진격에 호응하여 당과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무장폭동을 결행하려는 음모를 감행하였는 바, 1939년부터 미제국주의자들의 조선침략에 복무할 것을 원수 앞에 맹약한 간첩 박헌영을 두목으로 하여 조직·수행되었다.”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박헌영은 南勞黨파를 대표하는 巨物이었다. 대중조직과 지식인 포섭에 능

했던 박헌영은 해방후 「조선공산당 재건준비회」를 결성하고 이어서 「조선공산당」을 발족, 세칭 「장안파공산당」(이명, 정백, 최익환)과의 이념투쟁에 승리함으로써 통일적 공산당의 최고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장안파의 노선을 「극좌적 기회주의」로 규탄하면서 「조선혁명」의 현단계 과업을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 통일전선의 조직을 강화함으로써 金日成의 路線과 하등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오랜 투쟁경력을 가진 박헌영이 정치의 중심지인 서울에서 「조선공산당」을 재건함으로써 ‘당중앙’의 권위는 이미 北韓國內派 共產勢力으로까지 암암리에 미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김일성은 1948년 정권수립과정에서 박헌영을 부수상 겸 외상으로 옹립하였으나 6·25남침전쟁의 발발원인이 김일성과 박헌영간의 권력투쟁의 산물이라는 이른바 「전쟁발발의 북한내부기원설」이 나올 정도로 두사람 사이의 권력암투가 지속되었다. 김일성은 1950년 12월 유엔군의 반격에 쫓겨 후퇴하던 중 평북 강계 「별오리」에서 당중앙위원회 제3

기 전원회의를 열고 “전투를 옳게 조직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물어 연안파 무정 등을 일단 숙청하였으나, 「미제국주의를 위하여 감행한 간첩행위」와 「공화국정부 전복을 위한 무장폭동 음모행위」를 걸어 남로당파를 전면 숙청함으로써 인민군총사령관으로서 당연히 져야 할 패전책임을 전가시킬 겸 거물정적 朴憲永을 제거시켰던 것이며, 이후 계속된 일련의 숙청을 정당화시키는 보다 높은 정치적 명분으로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에서 「主體」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같이 南勞黨을 소탕하자마자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 당대회가 개최 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20차 당대회에서는 흐루시초프가 「戰爭可避論」과 「의회민주주의과정을 통한 공산집권」〈사회주의에로의 다양한 길〉을 주내용으로 한 「平和共存論」을 제기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스탈린格下運動’이 진행되었다. 한편, 스탈린格下運動의 餘震으로 북한에서는 延安派, 蘇聯派가

중심이 되어 「작은 스탈린」격인 김일성을 축출시키려는 「8월종파사건」이 발생하였다. 최창익(연안파)과 박창옥(소련파) 등은 김일성이 경제원조를 얻기 위해 소련과 동구공산권을 방문한 (1956년 7-8월) 틈을 타 김일성 제거모의를 감행, 1956년 8월 30일 김일성 귀국보고를 위한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정책과 전후 경제복구정책의 실패 등을 정면으로 공격하였으나 김일성파의 소동으로 회의가 유산됨으로써 영성한 김일성 제거계획은 실패로 끝났다.

「8월종파사건」에 놀란 중·소양국이 미코얀과 彭德懷를 각각 평양에 파견, 공동수습에 나섬으로써 일단락되는 듯 하였으나, 김일성은 1958년 5월 30일 「당중앙집중지도사업」을 단행, 반당반혁명분자 색출운동을 일으켜 全北韓社會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이 와중에서 연안파, 소련파, 국내파를 막론하고 반김일성세력을 모조리 숙청하였는 바, 김두봉, 최창익, 한빈 등 연안파도 모조리 숙청되고 駐蘇北韓大使였던 李相朝와 김일성편에 가담했던 허정숙 정도가 살아

남았다. 소련과는 소련으로 피신하여 상당수 살아 남았으나 박창옥은 숙청되었다. 이리하여 1961년 9월 제 4 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 80명과 후보위원 50명은 모두 김일성의 이른바 「抗日빨치산派」와 그의 맹종자들이었으며, 그 후에도 숙청은 계속되어 1970년 11월 제 5 차 당대회를 계기로 북한의 정치세력은 김일성파로 완전히 一色化되었다. 한마디로 북한의 정치사는 肅清史였으며, 숙청의 정치적 명분은 사대주의, 수정주의, 형식주의, 宗派主義로 「主體」를 배반한 반당·반혁명분자의 제거였다.

나. 「金日成 抗日빨치산 鬭爭」 時期로 遡及 (1930년)

북한문헌에서 「主體」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앞서 지적한 대로 1955년 12월 28일 선전·선동일꾼대회에서 행한 김일성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에서부터 었다. 그런데 이 시점은

中·蘇理念紛爭의 시발점이 되었던 1956년 2월 제20차 소련공산당대회 직전이어서 “맑스·레닌주의를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였다.”는 「주체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중국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였다.”고 하는 「모택동사상」의 亞流로 평가절하될 것이라고 북한당국은 우려한 듯하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20차 소련공산당대회를 계기로 “자본주의국가와 공산주의국가간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戰爭可避論」과 “폭력혁명이 아니고 西歐의회제도 속에서 공산당이 다수당이 됨으로써 執權할 수 있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흐루시초프가 「平和共存論」을 제기하자, 이를 修正主義라고 비난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정통을 毛澤東思想이 계승한다”고 주장함으로써 中·蘇理念紛爭이 발단되었다. 자본주의가 발전되지 못한 중국의 현실에서 毛澤東思想은 농민을 「主力軍」으로 한 혁명론을 개발·구현시켰으며, 유격전·지구전 전략을 개발·실현시킴으로써 중국혁명을 달성하

였다. 이러한 중국의 사회·문화에 바탕을 둔 혁명은 「소련식」과는 다른 사회주의 혁명의 중국적 모형을 만들어 냈으며, 이것은 마르크스·레닌·스탈린·흐루시초프로 이어진 「소련식」공산주의 노선으로부터의 이탈이었다. 이른바 ‘獨自路線’인 것이다.

한편, 김일성이 1955년 12월 28일 선전·선동일꾼모임에서 「主體」문제를 제기한 것도 성격상 ‘獨自路線’의 亞流였다. 이른바 反黨·反革命 宗派分子를 숙청하기 위한 국내정치적 명분으로 제기되었지만, 이른바 「主體」를 표방할 수 있는 국제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면 불가능 하였을 것이다. 1953년 스탈린통치가 종식되고, 소련의 對 공산권통제력이 이완되면서 중국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가능했었다. 그런데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의 흐루시초프의 「平和共存論」제기로 표면화되기 시작한 중·소이념분쟁에서 북한은 김일성의 「東北抗日聯軍」으로서 이른바 「抗日빨치산 鬭爭」과정에서의 인연, 북한·중국간 공산주의 발전단계의 유

사성, 북한·중국간의 지리적 근접성 그리고 아시아 문화권으로서의 역사적 밀착 등으로 사실상 중국쪽으로 기울었다.

뿐만 아니라, 제 2차 세계대전후 소련의 對극동정책에 따라 「위성정권」으로 출발하면서 「蘇軍政期」 이래 스탈린의 정치적 통제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金日成은 6·25남침전쟁을 계기로 점차 소련으로부터 멀어져 이른바 ‘血盟關係’를 맺게 된 중국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요인들이 겹쳐 김일성이 1955년 12월 28일 제기한 「主體」문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中國化 즉 毛澤東思想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김일성이 「주체」문제를 제기한 1955년 12월 28일은 중·소이념분쟁이 발단된 1956년 2월 제20차 소련공산당대회 직전이어서 그야말로 「主體思想」의 주체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즉, 「主體思想」은 「毛澤東思想」의 복사판으로 인식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에서인지 김정일은 1982년 3월 31일 김일성출생 70돌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주체사상」의 창시년대를 이른바 ‘抗日빨치산투쟁시기’로 소급시키고 있다. 즉 “수령님께서는 고루한 민족주의자들과 행세식 맑스주의자들, 사대주의자들과 교조주의자들을 반대하고 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는 투쟁과정에 주체사상의 진리를 발견하였으며 마침내 1930년 6월 카륜에서 진행된 共靑 및 反帝靑年同盟指導幹部會議에서 주체사상의 원리를 천명하시고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을 밝히시었던 것이다. 이것은 주체사상의 창시와 주체의 혁명로선의 탄생을 선포한 역사적 사변이었다. 수령님께서는 아직 20대에도 이르시지 못한 젊으신 나이에 민족개량주의, 좌우경기회주의 등 온갖 어지러운 사상들이 판을 치는 혼란속에서 시대의 지향과 인민의 념원,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꿰뚫어 보시고 주체의 진리를 밝히시어 우리 혁명의 자주적 발전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밝히고 있다.

“1920년대 民族解放運動을 한다고 하던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은 인민대중을 교양·조직

화하여 혁명투쟁을 할 생각은 안하고 대중과 이
탈하여 령도권싸움과 파벌싸움만 하였으며, 국제
당승인을 받으려고만 다녔으며, 식민지 반봉건사
회였던 우리나라의 역사적 조건과 구체적 현실을
떠나서 기성이론과 남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모방
하려 하였다. 이러한 사대주의, 교조주의로부터
탈피하여 인민대중의 힘을 발동시켜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를 실현, 「朝鮮革命」을 완성시키려는
데서 「주체사상」이 태동되었다.”는 것이다.

김정일논문은 이와 같이 파노라마처럼 날조된
「金日成 抗日 빨치산 鬪爭史」와 연계시킴으로써
毛澤東思想의 亞流로 취급되는 「주체사상」의 취
약점을 근본적으로 불식시키려 할 뿐만 아니라
‘主體思想의 뿌리’를 깊이 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의 행적이 중국공산당 휘하의
「東北抗日聯軍」으로 활동하였을 뿐 「조선인민혁
명군」을 창설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1941년초 蘇領 하바로브스크로 탈출하여 소련군
정찰부대인 88특별여단에 배속, 대위신분으로
8·15를 맞은 사실이 밝혀진 이상, 사대주의와 온

갖 좌우경기회주의를 물리칠 주체사상을 창시하였다는 김정일논문의 주장은 또 하나의 엄청난 歷史捏造인 것이다.

다. 「金日成主義化」 試圖

북한의 통치이념은 黨大會를 계기로 변질되어 왔다. 1956년 4월 조선노동당 제 3 차 대회에서 기존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조선인민의 혁명 전통」이 추가되어, 1961 9월 제 4 차 당대회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으로 구체화되었다가, 1970년 11월 제 5 차 당대회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主體思想으로 변형되어 처음으로 主體思想이 등장되며, 1980년 10월 제 6 차 당대회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삭제되고 主體思想만이 유일한 통치이념으로 등장한다. 즉,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하면 「主體思想」은 일시에 하늘에서 완성품으로 떨어진 사상이 아니

라 革命情勢의 상황전개에 따라 보완·발전·변형되어 왔다. 「주체사상」의 변형·체계화단계를 설명의 편의상 1955년 12월 28일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란 김일성연설에서 「주체」문제를 처음 제기한 시기로부터 1982년 3월 31일 김일성생일 70돌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를 계기로 김정일이 「주체사상에 대하여」란 논문을 발표한 시기까지를 「주체사상」의 체계화단계로 보고, 그 이후 1990년대 공산권전반에서 개혁·개방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조선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를 외치던 시기를 또 한 단계로 보고, 1991년 8월 1일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라는 김일성논문을 계기로 소연방 와해후 급변하는 공산권정세 속에서 「민족주의」를 부각시키는 시점을 또 하나의 단계로 설정하여 「주체사상」의 체계화 과정을 살펴본다.

(1) 「主體思想」의 體系化 (1955년~1982년)

이 기간동안의 이른바 「革命情勢」를 먼저 살펴

본다. 이 기간은 국내정치적 측면에서 무자비한 숙청을 통하여 김일성독재체제를 확립하고 그 바탕위에서 김정일세습후계체제를 구축하는 기간이었다. 1955년 12월 15일 남로당출신 거물 박헌영의 숙청을 마지막으로 남로당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어서 1958년 노동당 중앙집중지도사업을 벌여 연안파, 소련파를 제거하여 「8월종파사건」을 마무리하였으며, 그후 일련의 숙청을 통하여 반김일성세력을 완전히 숙청시킨 바탕위에서 앞서서 밝힌대로 1970년 제 5 차 조선노동당대회를 개최하였다. 제 5 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은 김일성독재체제의 확립을 배경으로 “조선로동당은 맑스·레닌주의와 우리나라의 현실에 그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통치이념을 표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외교적으로 북한은 중·소이념분쟁이 표면화되면서 소련의 정치적 통제권에서 점차 벗어나는 일방, 「反帝自主化」와 심지어 「社會帝國主義論」까지 내걸고 이른바 「쁘럭불가담국가」에 대

한 외교를 강화, 「주체사상」의 적용을 외교영역으로 확대하였다. 이런 바탕위에서 1966년 8월 12일 ‘노동신문’논설 “자주성을 옹호하자”가 나왔다.

“국제관계에서도 우리 당은 자주적으로 활동하였다. 현대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도 독자적으로 진행하였다. 오늘날 세계에는 수많은 공산당·로동당이 있으나 큰 당과 작은 당이 있을 뿐, 높은 당과 낮은 당, 지도하는 당과 지도받는 당은 있을 수 없다. 누구는 중앙적 위치에서 지시하고 통솔하며, 누구는 그 밑에서 복종하고 떠받드는 관계란 있을 수 없다. 그들의 호상관계는 완전한 평등, 자주, 호상존중, 내정 불간섭, 동지적 협조 등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공산당·로동당들이 자주성을 옹호하는 것은 반제공동투쟁을 강화하는 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자주성의 원칙은 고립주의가 아니며, 반제투쟁에서 국제주의적 연대성과 공동행동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것은 자기나라 혁명도 잘하고 세계혁명도 잘하자는 것”이라고 밝히

고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자주성을 옹호하자」는 ‘로동신문’ 논설이 게재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정권이 소련의 정치적 統制圈에서 사실상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숙청을 통한 김일성독재체제와 외교적 자주권의 확립 위에서 북한은 이른바 「社會主義 革命」段階로 진입할 수 있었으며, 그것은 1972년 12월 27일 「社會主義 憲法」의 채택으로 가시화되었다. 「사회주의 헌법」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 정권이며 (제 3 조),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아(제 4 조),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여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 5 조)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김일성독재체제를 바탕으로 「사회주

의혁명」단계로 진입하면서 북한은 ‘金正日世襲後繼作業’을 시작한다. 金正日是 1973년 9월에 개최된 노동당중앙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중앙위원회 비서국의 조직 및 선전·선동담당비서로 선출되면서 김일성후계자로 부상, 1980년 노동당 제 6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기구신설), 비서국 비서,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노동당을 장악, 김일성후계자로 공식화되었다. 또 1990년 5월 제 9기 제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중앙인민위원회」에서 분리되어 지위가 격상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되어, 黨權과 더불어 軍權을 장악하였으며 1991년 말 최고 사령관이 됨으로써 후계기반을 공고히 구축하였다.

그러나 김일성 「神政體制」를 대신할 김정일의 정치적 카리스마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였다.

(1) 김정일은 김일성동지의 抗日빨치산 투쟁의 참모부였던 白頭山 密營에서 백두산정기를 타고 출생하였으며 〈백두산일대를 聖城化하고 최근에

는 「김정일 탄생신화」를 조작하고 있으나, 김정일은 김일성이 蘇領으로의 탈출후 소련태생임)

(2) 예술의 천재이며〈신상옥 최은희 납치후 그들의 작품을 김정일의 지도에 의한 작품으로 둔갑시킴〉

(3) 「주체사상탑」, 「인민대학습당」 「개선문」등 이른바 「조선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 건조물」을 세워 혁명의 수도, 평양을 웅장·화려하게 꾸몄다고 선전하는 일방,

(4) 수령이 창조한 「주체사상」을 계승·발전시킨 「사상의 천재」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후계체제 구축작업과 연계되어 「주체사상」의 체계화 작업이 맞물려 추진된다.

김정일은 1974년 2월 19일 「전국 당사상사업부 문 일꾼강습회」에서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란 연설을 하였다고 한다.

「김일성주의」는 ‘주체의 사상, 이론 및 방법의 체계’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체사상」에 철학적 외피를 입히는 작업을 계속하여 마침내 1982

년 3월 31일 김일성생일 70돌기념 전국주체사상 토론회를 계기로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고 그 체계와 내용과 원리 및 방법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하게 된다. 이 논문으로 「주체사상」의 이론화·체계화는 일응 일단락되었다. 다만 「모택동사상」도 「모택동주의」로 호칭되지 못하는 국제공산주의의 현실에서 아직 「김일성주의」라는 명칭을 공식문건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같은 「주체사상」의 체계화과정은 「統一方案」의 정립과정과 맞물려 있음을 注目해야 한다. 숙청의 진행과 더불어 김일성의 독재권력 기반이 강화되면서 북한의 對南政策路線은 강경노선으로 급선회, 「南朝鮮革命力量」을 강화하기 위하여 政治투쟁과 經濟투쟁, 合法투쟁과 半合法·非合法투쟁, 暴力투쟁과 非暴力투쟁의 配合을 선동한 1970년 11월 제5차 노동당대회에서의 김일성연설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 월남전 종식외교과정에서

美·中接近이 가속화되는 국제적 긴장완화 추세
의 파장속에서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
평화통일 3원칙을 밝히는·7·4 남북공동성명이 발
표되었으며, 1974년 3월 25일 對美平和協定체결
주장이 제기되고, 이어서 1980년 10월 10일 제 6
차 노동당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
안의 제의를 계기로 북한의 통일방안의 골격이
완전히 잡혀지는 바, 북한의 이른바 통일방안은
한마디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주체사상」을
바닥에 깔고 있다. 제 6차 노동당대회에서 개정
된 「조선로동당 규약」은 그 서문에서 “조선로동
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며,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
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
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
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2) 「朝鮮式 社會主義」(1982~1990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체사상」은 1982년 3월 31일 김정일논문을 계기로 이론적 체계화를 일음 갖추게 되었으나, 공산체제전반에서 개혁·개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등소평의 실용주의노선에 따라 1978년경부터 개혁·개방정책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중국은 인민공사의 해체와 鄉鎮制의 도입, 시장경제원리의 채택 등 국내경제체제를 개혁할 뿐만 아니라, ‘경제특구’ 등을 설치하여 선진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등 대외개방 경제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북한에게도 개혁·개방정책을 종용하였으나, 1982년 중국을 방문하여 실용주의정책의 표본지역인 四川省을 둘러 본 김일성은 중국현대화정책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맑스·레닌주의를 중국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시킨 결과”로 의미를 부여, “우리는 맑스·레닌주의를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방향제시를 하고 평양에 돌아오자마자 “우리는 우

리식대로 산다”는 현수막을 내걸게 하였다. 동시에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과 거리감을 느낀 김일성은 예의 ‘양다리 外交’에 따라 1984년 공식적으로 23년 만에 소련 및 동구공산권을 방문하기에 이르나, 특히 동구공산제국의 발전상에 충격을 받아 북한이 사회주의 지상낙원이 아님을 실감, 그해 9월 8일 중국의 「中外合資經營企業法」을 본받아 「合營法」을 제정, 극히 제한적인 對外經濟開放을 시도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對內政治體制의 개혁은 고사하고 경제체제의 개혁을 동반하지 않는 부분적인 對外개방 경제정책이 성공할 리 만무하다. 이런 가운데 1985년 고르바초프 집권후 소련마저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조선식 사회주의」는 四面楚歌가 되었으나, 외부로부터의 개혁·개방의 압력이 가중되면 가중될 수록 이른바 「보다 높은 사회주의단계」를 향하여 전인민의 노동계급화를 표방, 「조선식 사회주의」의 수호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상황을 배경으로 「주체사

상」은 특유의 이론무장을 더욱 강화하기에 이른다. 이런 배경 위에서 김일성은 1986년 5월 31일 김일성고급당학교의 교직원, 학생들 앞에서 한 강의-허담 대독-「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에서 「주체의 혁명전통」을 내세우기에 이르렀으며, “우리 당에서는 혁명위업의 계승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다.”고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김정일세습후계체제의 구축을 확인하기에 이른다.

이어서 김정일은 1986년 7월 15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주체사상 이론체계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표방하기에 이른다.

한편 공산권전반에서의 개혁·개방정책이 더욱 심화되어 가는 상황하에서 「조선식 사회주의」가 搖之不動임을 북한주민에게 확신시켜야 될 절박한 상황에서 김정일은 1987년 9월 25일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에서 “제국주의의 필멸과 사회주의의 최후의 승리가 역사발전의 필연”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무리한 이론을 전개하기에 이른다.

(3) 民族主義슬로건의 浮上(1991~)

「조선식 사회주의」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은 앞서 밝힌대로 「반제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에서 제국주의의 필멸과 사회주의의 필승을 주장, 공산권전반에서의 개혁·개방정책에 따른 북한주민의 사상적 이완을 봉쇄하려 하였으나, 1990년 말을 전후하여 정세는 급변하였다. 사실상 북한의 종주국격인 소련에서 공산통치가 종식되었을 뿐만 아니라-결국 소연방해체-, 이보다 앞서 소련은 한국과 수교함으로써 이른바 ‘두개의 조선정책’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였으며, 동구공산권이 와해되고 「흡수통합」으로 <1991년 김일성 신년사에서>의 표현> 독일통일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혁명적 정세변화」를 배경으로 김일성은 1991년 신

년사에서 “지역정부에 권한을 많이 부여하는 방식의 연방제 통일”을 거론하기에 이르렀으며, 북한의 실무자들은 「외교권, 국방권을 지역정부에 부여한 국가연합」을 언급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남북한 유엔가입」이 실현되고, 드디어 1991년 12월 13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됨으로써 남북체제간의 평화공존—북한은 「하나의 조선정책」의 관철로 해석— 및 통일에로의 민족사적 거부가 내디디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체사상」 속에 내재된 ‘민족대단결’이념이 표면으로 부상한다. 따라서 김일성이 1991년 8월 1일 「조선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꾼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성원들에게 한 담화」,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는 원래 「주체사상」 속에 함축된 민족自主 개념의 단순한 재판이기보다는 급변하는 대내외정세에 북한 나름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체사상」의 새로운 각색으로 의미부여를 해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3. 「主體思想」의 理論體系

「주체사상」의 이론체계를 발전과정과 관련하여 ‘기본이론’,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사회주의 필승론’ 그리고 ‘민족대단결론’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가. 基本理論

「주체사상」의 기본이론은 1982년 3월 31일 김일성출생 70돌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서의 김정일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계기로 일단 완결되었다.

(1) 哲學的 原理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모든 것은 “세계와 자기의 운명”이란 것이다. 이 철학적 원리에서 “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적 원리가 나온다고 말한다.

여기서 모든 것은 “혁명과 건설”이란 것이다. 지난 날 세계관의 발전역사는 상반되는 두 철학적 조류인 유물론과 관념론, 변증법과 형이상학간의 투쟁의 역사였는데 마르크스주의는 이 투쟁에서 唯物論과 辨證法의 승리를 확정시켰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르크스주의는 노동계급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은 하였으나 역사의 주인은 아니었던 시대상황-18,19세기의 서구자본주의의 초기단계-을 반영한 사상이며, 노동계급이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새로운 세계관이 「주체사상」이란 것이다.

그리고 物質과 意識, 存在와 思惟의 관계에서 물질과 존재의 일차성을 과학적으로 밝힌 것이 마르크스의 唯物論이라면, 세계의 始原問題가 유물론적으로 밝혀진 조건에서 세계에서 사람의 지위와 역할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사람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혁명과 건설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를 밝힌 것이 「주체사상」이란 것이다.

또 「주체사상」은 세계와 사람의 운명이 초자연

적인 힘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신비주의에 귀착한 觀念論이나, 세계의 모든 것은 고정불변이므로 사람은 주어진 운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宿命論에 귀착한 형이상학을 배격한 마르크스주의를 인정하면서도 (1) 自主性 (2) 創造性 (3) 意識性이란 인간의 사회역사적 본질적 특성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 「주체사상」이란 것이다.

사람과 인민대중의 기본속성인 ‘自主性’은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이며,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중요구성부분이란 것이다.

‘創造性’은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으로서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적 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은 낡은 사회제도를 개혁하고 인민대중의 사회적 해방을 이룩해 나가는 투쟁이며 투쟁을 떠나서는 새것의 창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意識性’은 세계와 자기 자신을 파악하

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으로서 인민대중의 계급적 사상의식이며 혁명과 건설은 투철한 계급적 사상의식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2) 社會歷史的 原理

「주체사상」에 의하여 역사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적 운동, 혁명운동의 근본원리가 새롭게 천명되었다는 것이다. 自然의 運動에는 주체가 없지만 社會的 運動에는 주체가 있으며 사회적 운동의 주체는 人民大衆이다. 따라서 반동적 착취계급은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이지만 사회주의사회에서 비로소 근로인민대중의 처지와 운명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주의사회의 발전과정은 온 사회를 노동계급화하는 과정이다.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자면 반드시 수령의 올바른 영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인류역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라는 것이다.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

은 인민대중이 계급적·민족적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정치적 조건을 마련하는 투쟁이라는 것이다.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 등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社會政治的 自主性을 실현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제도의 청산과 새로운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발전에서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주성을 옹호하려면 철저한 혁명적 입장, 노동계급적 입장, 즉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역사적 운동은 인민대중의 創造的 運動으로 규정한다. 창조의 과정은 곧 투쟁의 과정이며 투쟁을 떠나서는 새것의 창조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인민대중의 창조적 능력이 장성하는데 따라 사회역사적 운동은 더욱더 발전하게 되며, 노동계급에 의하여 조직전개되는 공산주의운동이 인류역사에서 가장 높은 형태의 창조적 운동이라는 것이다.

또한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自主的인 思想意識이라는 것이다. 사람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로 되자면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져야 하며,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革命運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혁명운동의 가장 높은 단계인 공산주의운동은 그 자체의 본질로부터 사람들의 높은 意識性을 요구하는 바, 자본주의는 기아와 몽둥이의 규율에 의거하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사람들의 높은 自覺性에 의거한다는 것이다.

(3) 指導的 原則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은 黨 및 國家活動, 革命과 建設의 모든 分野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지침으로서,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견지하며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根本原則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령은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으

로서 (1)思想에서 主體 (2)政治에서 自主 (3)經濟에서 自立 (4)國防에서 自衛의 원칙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며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사고하고 실천하며 모든 문제를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풀어 나가는 관점과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으로서, 노동계급의 혁명사상과 자기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무장하여야 하며, 당의 唯一思想體系를 세워야 하며, 높은 민족적 자존심과 혁명적 자부심을 가져야 하며,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고 대중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여야 하며, 사대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 따라 북한은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1955년 12월 28일 당선전선동일꾼들에게 행한 김일성의 연설에서 사상에서 주체문제를 제기한 이래 1973년 2월 김일성의 발의와 김정일의 주도로 ‘思想’, ‘技術’, ‘文化’의 「3大革命小組」를 조직하고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전개하였으

며, 1976년 4월 어린이를 주체형의 혁명적 새인간으로 교화시키기 위한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제정하는 등 이른바 ‘共產主義 人間改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정치에서 자주」는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하며 자기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는 정치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정치에서 自主性을 保障하기 위해서는 인민정권을 세워야 하며, 주체적인 정치적 역량을 꾸려야 하며, 자기의 指導思想을 가지고 자신의 결심에 따라 노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관철하여야 하며,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政治에서 自主를 내세워 소련과, 연안파를 宗派分子로 몰아 숙청하였으며, 중·소이념 분쟁에서 이른바 「양다리 外交」를 전개할 수 있었던 바, 1966년 8월 12일자 ‘로동신문’ 사설 “자주성을 옹호하자”는 정치·외교영역에서 자주적 입장을 대외적으로 공식선언한 것으로서 “지배주의 정책으로부터 자주성을 옹호하자”는 이른바

뿌리깊은외교-비동맹외교-의 명분일 뿐만 아니라 이른바 「남조선의 美帝植民地論」과 연계되어 대남전략의 기본명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오늘날 공산제국전반의 개혁·개방정책을 북한이 외면하고 있는 정치적 명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경제에서 자립」은 自立的 民族經濟를 건설하는 것으로서, 경제건설에서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하고,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나 重工業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輕工業과 農業을 동시에 발전시켜야 하며, 경제를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며 민족기술인재를 대대적으로 육성하여야 하며, 자체의 원료·연료기지를 튼튼히 꾸린다는 것으로서, 自立的 民族經濟를 건설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경제협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명분은 1956년 12월 11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의 김일성연설에서 처음 제기되었으나, 실은 소련으로부터의 경제원조획득에 실패하자 ‘社會主義 總路線’, ‘大躍進運動’ 등 毛澤東의 자력갱생

운동을 모방한 자구책이었다. 김일성은 1958년 ‘천리마 운동’을 시작한 이래 북한주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켜 〈물질적 자극방식 개념에 대응하는 정치·도덕적 刺戟方式〉이른바 자립적 사회주의 민족경제건설 명분 밑에 공산제국 전반에서의 개혁·개방물결을 외면하였으나, 1984년 「습營法」 채택을 계기로 제한적이거나 對外開放經濟政策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자력갱생식 경제건설정책의 한계성’을 자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끝으로 「국방에서 自衛」는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기본원칙으로서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자위적 무장력을 가지지 못한 나라는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국주의는 전쟁의 항시적 근원이며 오늘날 침략전쟁의 주세력은 미제국주의로서,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는 해방전쟁으로 맞서고 반동들의 반혁명폭력에는 혁명적 폭력으로 맞서야 하며,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세우자면 전군을 간부화·현대화하고 전인민을 무장시키고 전국토를 요새화하여야 하며,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려면 인민무력의 정

치사상적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자체의 국방공업을 건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후방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국방에서 자위를 관철하기 위하여 1962년 12월 10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4大軍事路線」을 표방하면서 “경제발전을 몇년 지연시키더라도 국방력을 일층 강화시켜야 한다”고 김일성이 말한 이래, 국민총생산 대비 24% 내외의 방대한 군사비를 지출하여 국방력증강에 박차를 가하여 왔다. 그러나 자위적 국방태세 표방과는 달리 북한군사력은 소련의 무기체계에 의존해 왔으나, 한·소수교 이후 1961년 「조·소우호협조 상호원조조약」이 사실상 死文化되는 급변한 군사정세하에서 북한은 핵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핵사찰 수락을 위한 국제적 압력을 自招하였다.

다음, 「주체사상」의 指導的 原則은 혁명의 노선과 전략·전술을 세우고 관철하는데서 창조적 방법을 具現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創造的 方法은 우선 (1)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인민대중은 누구보다도 현실을 잘 알며 풍부한 경험을 가짐으로써 인민대중의 의사와 지향을 반영한 路線과 方針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대중속에 깊이 침투시켜 대중 자신의 것으로 되게 하여야 하며, 인민대중을 굳게 묶어 세우자면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옹계 결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主體의 事業方法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의 입장을 지키고 역할을 다하게 하는 사업방법이란 것이다.

그리고 (2)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이 창조적 방법인 바 혁명운동은 변화·발전하는 현실과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맞게 풀어 나가야 하며, 시대의 역사적 조건과 자체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원리와 방도를 적극 탐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은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1) 사상개조 선행, (2) 정치사업 선행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思想改造」는 사회의 모든 성원을 혁명화, 노동 계급화, 인텔리화하여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말하는 바, 사상개조는 하나의 심각한 혁명으로써 주체형의 혁명관을 세우야 하며, 그 핵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革命觀이 옳게 섰는가 안섰는가는 특히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 나타나는 바, 革命的 學習을 강화하여야 하며, 革命的 組織生活을 잘하여야 하며, 革命的 實踐속에 단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이 본질이며,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제도의 本性的 要求로서, 인민대중을 사회주의 건설에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하자면 정치도덕적 자극을 위주로 하면서 물질적 자극을 옳게 배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과도적 성격을 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의 질과 량에 의한 社會主義分配原則을 실시하여야 하며 물질적 자극을 무시해서는 안되나, 물질적 자극을 위주로 하는 것은 個人利己主義를 조장하고 물질에만 매달리게 하여 결국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부식시키는 위험한 사고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사업은 설득과 교양의 방법으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벌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나. 社會政治的 生命體論

김정일은 1973년 9월 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의 조직·선전담당비서로 등장, 김일성후계자로 부상하면서, 점차 이데올로기 해석권을 완전히 독점, “수령이 창시한 위대한 主體思想”을 계승·발전시켰던 바, 공산체제에서의 개혁·개방정책이 심화되어 가는 국제혁명정세하에서 1986년 7월 15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킨 이른바 「社會政治的 生命體論」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김일성은 이미 1964년 「조선로동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의 연설에서 ‘政治的生命’이란 말을 사용한 바 있으나, 당시 정치적 생명의 대상은 ‘당원’이었을 뿐, 인민대중을 포함하지 않았고 「首領論」도 제기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한편, 김정일은 1982년 3월 31일 「주체사상학술회의」에 보낸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처음言及하였으나, “육체적 생명이 생물유기체로서의 인간의 생명이라면, 사회적·정치적 생명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생명”이라고 언급하는 수준이었을 뿐,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理論化·體系化는 4년 후에 이루어진 셈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공산체제에서 개혁·개방정책이 심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주체사상에 입각한 조선식 사회주의의 正當性을 제시하기 위한 요청을 內在시키고 있었던 바, 1987년 외부에 공식발표되었을 당시는 정치적·외교적 고려로서 削除시켰던 제3장이 소련·중국의 체제개혁을 비판하는 내용이란 사실이 이를 反證한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核心은 이른바 「革命

的 首領觀」이다. 인민대중은 역사의 주체이지만 언제나 자기 운명을 자주적·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역사의 자주적인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黨의 領導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룰 때 인민대중이 歷史의 自主的인 主體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밝혀진, 개인의 육체적 생명과 구별되는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은 首領, 黨, 大衆의 통일체인 사회정치적 집단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으며, 개별적 사람들의 생명의 중심이 뇌수이듯이, 사회정치적 집단의 生命의 中心은 집단의 최고뇌수인 수령이라는 것이다. 즉,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統一的으로 지휘하는 중심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수령을 중심으로 組織思想的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인민대중의 핵심부대로서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中樞를 이루고 있는 것이

黨이란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조직과 당이 영도하는 사회정치조직의 한 成員으로서 조직사상생활에 적극 참가함으로서만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인 수령과의 혈연적인 연계를 공고히 하고 자기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首領, 黨, 大衆은 하나의 生命으로 결합되어 운명을 같이 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革命的 義理와 同志愛의 관계는 지금까지 중요시해 온 자유와 평등의 관계를 전제로 하지만, 같은 차원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배경위에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이 개인의 생명의 모체라는 ‘集團主義的 生命觀’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패배주의는 당과 수령의 사상을 자기의 신념으로 만들지 못하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지 않는데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형식주의·요령주의·사대주의·교조주의는 혁명적 수령관이 서 있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혁명적 의리와 동지적 사랑은 環境과 條件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자기 부모가 반드시 다른 부모들보다 낫거나 어떤 덕을 바래서가 아니라 자기를 낳아 키워준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이듯이 혁명적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이 오직 자기 생명의 모체인 수령, 당, 대중과 生死運命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령은

(1) 일제통치의 암담한 시기에 모든 간난신고를 이겨 내면서 잃었던 조국을 찾아 주고

(2) 이 땅위에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을 건설 하였으며

(3) 일본제국주의와 미제국주의를 타승하고

(4) 오늘날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와 직접 맞서 있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인민의 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버이 수령’으로부터 영생하는 정치적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상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뇌수’로서의 수령, 수령과 인민을 결합시키는 中樞 혹은 血管으로서의 당, 그리고 ‘생명체’로서의 인민대중을 三位一體로 하는 「社會有機體論」으로서, 이러한 사회주의사회는 계급적 대립이 청산되고, 착취와 압박이 없이 사회의 모든 성원이 당의 지도아래 수령의 주위에 결속되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살아가는 사회로 재정의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공산주의사회에서 완전히 실현될 수령, 당, 인민대중의 統一體는 기독교의 神, 教會, 信者의 三位一體와 대비될 지 모를 상태로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인민에게 영생하는 정치적 생명을 주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계기로 사회주의는 생산관계의 변화에 착안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단계를 사실상 벗어났으며, 사회주의사회의 우위성에 관해서도 생산력수준으로서는 측정할 수 없게 되었는데, 아무리 생산력이 발전되고 물질적 財貨가 늘어나도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되지 못하면 인민대중의 본질인 자주적·창조적 생활이 불가능하

며, 사회주의제도에서만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다. 社會主義 必勝論

김정일은 1987년 9월 25일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반제투쟁의 가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에서 주로 「社會政治的 生命體論」적 관점에서 사회주의체제의 우위 내지 역사적 필승을 나름대로 이론화, 「조선식 사회주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바, 공산체제에서의 개혁·개방에 대한 입장과 이른바 ‘오늘의 혁명정세’에 대한 전반적인 정세관이 반영된 것으로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김정일의 제2차 세계대전후의 자본주의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戰敗國은 물론, 英·佛 등 연합국측의 자본주의열강도 심대한 타격을 받은 반면, 군수산업의 확장 등으로 미국만

이 세계 최대의 채권국가로 등장 국제경제를 주도하는 가운데, 多國籍企業體들을 통하여 자본의 국제화를 급속히 진행, 자본주의국가간 상호관계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 최후단계로서 ‘제국주의전쟁’을 상징했던 레닌의 주장을 뒤엎고 제국주의열강들은 경제기술적으로 相互依存·結託關係로 변모하였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후 40여년 동안 170여회의 크고 작은 전쟁이 발발하였으나, 자본주의열강간의 전쟁은 한번도 없었으며, 오히려 그들은 군사적 결탁관계를 더욱 강화하였다는 것이다. -

제국주의자들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결탁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치수법·약탈방법이 교활해져 ‘勞動貴族’을 양산하는 등으로 근로대중의 반항을 무마하고 신생독립국가와 발전도상국가의 자주권을 명목상 인정해 주고 원조제공방법 등으로 정치·경제적 예속화를 추구하는 ‘新植民主義’에 매달리고,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들은 식민지쟁탈전 대신 경제기술적으로 결탁하여 방대한 市場과 原料·資源을 장악함으로써 생산의 사회

화수준이 급격히 향상되고 기술수준이 급속히 발전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이 해결된 것은 아니며, 약탈의 본성이 변화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다국적기업들의 등장으로 每個 자본주의국가 범위의 ‘富益富, 貧益貧’현상이 세계적 범위의 현상으로 확대·심화되었으며, 발전도상국가에서의 민족산업몰락, 빈궁화의 심화, 대외채무의 증대에 따른 구매력의 상실 등으로 생산제한문제가 제기되어 자본주의는 실업자대열이 늘어나고〈서구 주요 자본주의국가의 실업률 12~13%〉통화팽창에 따라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김정일은 이같은 자본주의의 위기를 미국경제의 현실을 들어 예시하고 있다.〉따라서 자본주의가 정치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이른바 ‘신식민주의적 국제경제질서의 재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김정일논문의 핵심은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이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심각한 내부모순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본가들은 상품판로가 점점 더 막히게 되자 비인간적 수요를 인위적으로 창출, 물질생활에서의 畸形化, 정신문화생활에서의 貧窮化, 정치생활에서의 反動化를 도모하게 마련이며, 이것이 현대 제국주의의 기본특성이란 것이다. 사람은 물질문화생활 뿐만 아니라 정신문화생활을 영위하며, 사회의 평등한 주인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이므로, 이를 실현하려면 사회주의에로의 길뿐이며, 오늘날 자본주의는 인민대중과 자본가계급간의 矛盾이 더욱 深化되어 파멸의 길로 줄달음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한손으로는 핵무기를 휘두르고 다른 손으로는 돈주머니를 흔들면서 날라리춤을 추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대제국주의가 임종에 가까워 가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며,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것은 歷史的 必然性”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스스로 멸망하지 않으며 노동계급을 선두로 하는 근로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 의해서만 망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선진자본

주의국가는 종래의미의 노동자대중과 새로 증가된 기술노동자, 정신노동자들이 전체 직업주민의 80~90%를 점하는 社會階級構成의 변화가 일어났으므로 이들을 자주적으로 살려는 투쟁대열로 물기 위한 정치사업교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제2차 세계대전후의 역사발전과정을 (1) 소련의 승리, (2) 많은 사회주의국가의 출현 등을 예로 들어 사회주의의 승리의 역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사회는 個人利己主義를 반대하고 集團主義에 기초하여 전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는 노동계급의 본성적 요구를 구현시키는 사회라는 것이다.

라. 民族大團結論

「조선식 사회주의」는 김정일논문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에서 들어난 바와 같이 사회주의의 우월성, 궁극적 승리의 필연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김정일은 상기 논문에서 공산체제의 개혁·개방을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즉, 털어놓고 말하여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는 새 사회제도를 관리·운영하는데서 좌·우경적인 편향도 범하였다. 혁명과 건설이 진행되는 역사적 조건이 서로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 상호간의 문제를 처리하는데서도 일련의 엄중한 편향이 나타났으나, 이러한 편향들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는 인연이 없고 사회주의 제도를 관리·운영하는 사람들의 경험부족과 정치사상적 준비부족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개혁·개방의 차원이 아니라 동구공산권이 붕괴되고 소련의 공산통치가 종식되고 연방이 해체되는 그야말로 ‘엄혹한 革命情勢’ 하에서, 김일성은 1991년 8월 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꾼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 본부성원들과 한 담화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

룩하자'에서 계급보다 민족을 상위에 놓는 '탈바꿈'을 하기에 이른다. 김일성은 이미 주체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1955년 12월 28일의 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에서 "조선의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력사를 알아야 하며 조선의 지리를 알아야 하며 조선인민의 풍속을 알아야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마치 민족적 전통을 무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이 얼마나 위엄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남조선청년을 쟁취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여 '민족적 탈'을 썼다. 그 이래 「주체사상」은 반외세적·민족주의적 입장을 펴온 것이 사실이나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는 담화내용은 그 강도가 달라져, 국내외정세의 혁명적 변화속에서 김일성의 민족주의 감정을 對南戰略에서 최대한 활용하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되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민족주의는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진보적 사상으로 발생하여 신흥부르조아지들이 민족주의기치를 들고 민족운동의 선두에 선 것은

사실이지만 민족주의가 처음부터 자본가계급의 사상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부르쥬아 민족운동시기는 인민대중의 리익과 신흥부르쥬아지의 리익이 기본적으로 일치하여 민족주의는 민족공동의 리익을 반영하였다. 그후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부르쥬아지가 반동적 지배계급으로 되면서 민족주의는 자본가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사상적 도구로 되었다. 따라서 부르쥬아 민족주의는 진정으로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참다운 민족주의와 배치되는 사상이며, 정신노동을 하든 육체노동을 하든 자기 민족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하는 사람이면 참다운 민족주의자로 될 수 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일찌기 「지원」의 사상을 내놓고 우리들을 애국주의사상, 민족자주사상으로 교양하여 나는 처음부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생을 바칠 각오로 투쟁의 길에 나섰으며, 이런 의미에서 나는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이고 국제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다. 온 민족이 화합하고 하나로 단결한다면 그것이 곧 우리가 바라는 조국통일

이다. 우리는 민족반역자를 내놓고는 모든 사람들을 대담하게 포섭하는 원칙에서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의 사업을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민족의 분열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형성된 제도상의 차이나 사상과 리념의 차이보다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된 민족의 공통성이 더 크며, 개별적 계급, 계층의 이해관계보다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통일을 이룩하려는 민족공동의 요구가 비할 바 없이 더 중요하다. 계급과 계층은 민족의 한 부분인 만큼 어떤 계급과 계층도 민족공동의 리익을 떠나서는 자기의 리익을 실현할 수 없다. 민족이 있고서야 계급이 있을 수 있으며, 민족의 리익이 보장되어야 계급의 리익이 보장될 수 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과 남, 해외동포 사이에 접촉과 래왕을 많이 하고 대화를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와 조직들, 각계 각층 동포들의 조직적

인 연합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 「주체사상」의 이론체계를 다음 장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4. 「主體思想」의 役割과 限界

「주체사상」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1955년 12월 28일 선전·선동일꾼대회에서의 김일성연설에서 주체문제가 제기되어 〈김정일은 1930년 카룬회의로 소급시켰지만〉 1966년 8월 12일 「로동신문」 논설 ‘자주성을 옹호하자’에서 외교영역에 적용되고, 19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헌법과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규약에 반영되면서, 1982년 3월 31일 김정일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일단 理論的 骨格이 完結된다.

그리고 공산체제 전반에서 개혁·개방의 물결이 怒濤와 같이 일어나고 북한도 마침내 1984년 9월 8일 중국의 「中外合資經營企業法」을 본받아 「合營法」을 제정하여 對外開放 經濟政策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선식 사회주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1986년 5월 31일 ‘조선로동당건설의 력사적 경험’, 1986년 7월 15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1987년 9월 25일 ‘반제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등의 김일성·김정일연설을 거치면서, 「주체사상」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사회주의 필승론」 등으로 분장된다. 한편 동구공산권의 붕괴, 소련공산통치의 와해 및 소연방 해체의 혁명적 정세변화 속에서 「주체사상」은 “계급보다 민족을 앞세우는” ‘탈바꿈’을 위장하기에 이른다.

주체사상은 세계의 始原問題가 唯物論〈물질과 의식, 존재와 사유의 관계에서 물질과 존재의 一次性을 확인하는 唯物辯證法 및 唯物史觀〉의 으로 밝혀진 조건에서 세계에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문제를 새롭게 밝혔다고 김정일은 「주체사상」의 역사적 의의를 스스로 평가하였다. 즉, 사람에 관한 문제는 선행철학에서도 수많은 논의되었지만,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 등 사람의 사회역사적 속성을 체계적으로 밝힌 것은 「주체사상」

이 처음이란 것이다. 그러므로 「주체사상」은 물질세계발전의 최고산물인 사람에 의한 세계의 지배와 그 개조발전의 원리를 독창적으로 정식화함으로써 세계관의 초석을 새롭게 세웠다는 것이다. 「주체사상」은 사회역사에 작용하는 물질세계발전의 일반적 합법칙성을 시인하면서 사회역사에 고유한 합법칙성을 밝혀 노동계급의 社會歷史觀을 정립시킨 것이 중요한 공적이란 것이다.

이같이 하여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이를테면 「人間主體論」〈上部構造에 의한 下部構造의 지배〉으로 위장된 「주체사상」은 결국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회역사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규정한 사회역사관에 기초한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세기적 몰락을 목도할 때, 아무리 「사회역사적 생명체론」을 만들고 「사회주의의 필승론」을 외쳐 봤자, 「주체사상」이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오늘날 북한체제의 실상이 응변으로 대변하듯 「주체사상」은 경제발전에 실패하는 등 한계상

황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상 「사회역사적 생명체론」은 宗教的 狂信論이며, 「사회주의 필승론」은 國際情勢에 對한 片見의 極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북한당국이 「주체사상」을 萬病通治藥처럼 떠받드는 것은 金日成·金正日 「神政體制」—theocracy—유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주체사상」에 얽매어 오늘날 급변하는 국내외정세 상황속에서 북한이 체제적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체사상의 역할과 한계를 좀더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金日成·金正日 獨裁世襲體制

本名이 金成柱인 金日成은 1912년 4월 15일 평양 대동군 고평면 남리 칠골—현재의 만경대—에서 출생하여 중국공산당 휘하 「東北抗日聯軍」 소속—후에 6 師長—으로 이른바 「抗日빨치산 투쟁」을 하다가—「조선인민혁명군」을 독자적으

로 조직한 것은 아님. — 1941년초 일본 關東軍의 토벌작전에 쫓겨 그가 소속됐던 중국 「東北抗日聯軍」의 극소수 부대원들에 끼어 소련으로 도피, 대위신분으로 소련군 극동경찰국 소속 제88특별여단의 대대장으로 1945년 8월 15일 조국해방을 맞았으며, 해방후 스탈린에게 선택되어 蘇聯 對 極東政策의 일선 집행자로 부상되었으나, 건국전후 북한정국은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토착민족주의세력, 현준혁을 비롯한 토착공산세력, 박헌영을 정점으로 한 남노당세력, 延安派·蘇聯派 그리고 이른바 김일성 抗日빨치산파간의 각축장이었다. 앞에서 밝힌 대로 이러한 정치세력을 하나하나 숙청하여 — 徐大肅 교수는 이들 정체세력이 먼저 김일성에게 도전한 것으로 해석 — 대체로 1970년 제 5차 당대회를 전후로 북한의 정치세력 판도는 김일성세력으로 一色化되는 바, 숙청을 위한 정치적 명분이 「主體」노선에 반하는 反黨·反革命 宗派分子이었음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이러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 「主體思想」은

“人民大衆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이를테면 「人民主體論」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인민대중은 스스로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首領의 領導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결국 首領主體論으로 변신하여, 1972년 12월 27일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제 4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였으며, 1980년 10월 13일 제 6차 노동당대회에서 개정된 노동당규약은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하기에 이르렀다. 즉,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주체, 궁극적으로 독재체제를 정당화시키는 정치적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같은 김일성의 주체, 독재체제 그리고 사실상의 神政體制는 필연적으로 김정일세습후계체제로 발전된다. 김일성은 김정일세습체제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1) 革命繼承論—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 완수한다.—

(2) 血緣繼承論 — 수령의 핏줄을 이어받은 자가 후계자로 되어야 한다. — (3) 金日成化身論 — 김일성의 사상과 이론을 완벽하게 체득한 지도자이어야 한다. — 을 만들어 내어 反帝·反封建理念에 기초한 공산주의체제하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권력세습을 「주체사상」의 명분을 내세워 강행시킴으로써 死後安全裝置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주체사상」에 의한 김일성독재체제·김정일세습후계체제가 공산체제 전반에서 노도와 같이 일어나고 있는 개혁·개방의 물결속에 휩싸일 극한상황을 의식한 나머지, 수령, 당, 대중이 한몸뚱이라는 「社會政治的 生命體論」을 만들어 인민대중에 대한 김일성의 ‘領導’를 생명체의 ‘腦髓’의 기능에 연결시킴으로써 김일성·김정일의 독재정치를 완전무결하게 정당화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체사상」은 오늘날 북한정치의 안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정치적 안정은 한마디로 김일성·김정일 및 그 추종세력의 독재권력

유지를 위한 안정이며, 그야말로 북한인민대중의 복리와 행복을 위한 정치안정이 아니라는데 바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인류의 정치사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독재체제와 민주체제간의 오랜 투쟁사였으며, 민주체제의 승리와 그 정당성을 말하여 주고 있다. 국민역량의 조직적 동원에 효율적이라는 독재정치체제옹호론이 제기될 수 있으며, 그런 면이 단기적으로 실증되기도 하였으나 — 스탈린체제 · 나치체제 · 모택동체제 — 그야말로 인민대중속에 잠재화 되어 있는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효율적으로 유발시켜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정치의 多元體制가 월등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음이 오늘날 공산체제의 붕괴와 민주세계의 번영이 웅변으로 설명하고 있다.

나. 自立的 社會主義 民族經濟 建設

북한은 “자립적 사회주의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주체사상」의 이른바 ‘지도적 원칙’에

따라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치도덕적 자극방식」으로 인민대중의 힘을 동원, 경제를 건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자극방식」과 「정치도덕적자극방식」을 배합하되 어디까지나 「정치도덕적자극방식」이 선차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毛澤東思想에 따른 「三面紅旗運動」, 「文化大革命」流의 「천리마운동」, 「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 그리고 무슨무슨 전투를 끊임없이 전개시키고 있으며, 일판에는 항상 선전선동대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선전선동나팔을 불어대어도 노동이 개인이익과 직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形式主義, 要領主義가 판치게 마련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이른바 「社會主義的 競爭原理」를 도입, 노르마制 〈 협동농장에서 노력공수의 연간합계에 따라 농산물을 분배하는 방식 〉, 공장·기업소의 독립채산제, 분조작업

반운영 등을 채택하고 있으나, 私有財産制에서와 같이 노동의 대가가 개인의 이익과 직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탈린식 中央集中的 計劃經濟의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관리능력의 결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명령경제체제하에서 인간로보트로 전락된 북한주민의 자주성, 창조성의 마비—「주체사상」이념과 역행현상—로 오늘날 북한경제는 구조적 침체의 늪에 완전히 빠져 버렸다. 따라서 「주체사상」에 입각한 전체주의적 자원 및 노동력동원방식이 초기 경제건설단계에서 다소 능률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으나, 오늘날 이러한 긍정적 측면은 부정적 측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다.

이러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구조적 결함은 사실 오늘날 북한경제에서만이 아닌 보편적현상으로 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앞에서 밝힌 1987년 9월 25일자 논문, ‘반제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에서 경제외적인 자본주의사회의 부패, 그리고 계급간 기본모순의 상존 등을 들어

자본주의의 필멸과 사회주의의 필승을 주장하기에 혈안이 되었으나 이것은 한마디로 現實과 동떨어진 ‘自己合理化論’에 지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사회의 물질생활이 아무리 유족하여도 수령, 당, 대중이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어 혁명적동지애로 결합된 「주체조선」인민보다 행복할 수 없다는 극단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물론 人民幸福의 기준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것이나, 인류발전단계에서 벗어난 主觀的 幸福이 궁극적으로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즉 경제발전이 행복의 「充分條件」은 아니지만 「必須條件」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북한은 1984년 「合營法」에 따르는 對外 開放經濟政策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선진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對內經濟體制를 시장경제를 바탕으로한 경쟁경제체제로 전환 시켜야 한다.

오늘날 북한이 이같은 합리적 경제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제개방, 사회개방에 따른 김일성·김정일독재체제의 붕괴

를 의식한 때문이며 따라서, 노동력동원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는 「主體思想」은 북한경제 몰락의 주범으로 등장하였다.

다. 自主外交

북한은 북한사회의 사회주의 혁명역량, 남조선 사회의 인민민주주의 혁명역량과 더불어 이른바 「3大革命力量」의 일환으로서 「국제혁명역량」의 강화라는 명분밑에 ‘主體外交’를 전개하여 왔다. 주체외교는 1955년 12월 28일자 김일성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에서 명백히 들어난 바와 같이 본질적으로 흐루시초프의 평화공존 노선의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문제와 직결되어 출발하였다. 蘇軍政, 北韓政權의 수립, 그리고 6·25 남침전쟁 계획과정에서 김일성은 소련의 統制圈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나, 스탈린 死亡과 흐루시초프 등장후의 새로운 정세하에서 ‘주체’를 표방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후 中·蘇理念紛爭이

격화되면서 1966년 8월 12일 ‘자주성을 옹호하자’는 노동신문 논설이 대변하듯이 ‘외교에서의 주체’를 강력히 내세웠으나 사실 「주체사상」은 「모택동사상」쪽으로 경사, 모택동의 「제 3 세계론」과 맥을 같이 하면서 「블록불가담외교」—對中立圈外交—에 역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국제사회를 ‘지배주의 정책을 추구하는 나라’와 ‘자주성을 옹호하려는 나라’로 구분하고 지배주의정책—중국에서는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는 제국주의 나라와 더불어 사회제국주의 나라가 있다고 역설하여 사실상 反蘇路線을 공개적으로 표방, 이를 계기로 김일성은 중립권의 盟主로 등장하려고 기도하였으며, 이런 배경위에서 1975년 페루의 리마 비동맹회의에서 북한의 비동맹권 가입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북한의 ‘주체외교’는 反제국주의세력인 비동맹권외교와 관련되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다. 비동맹운동방향을 反帝政治鬭爭으로 몰고가 그에 힘입어 美帝의 植民地인 ‘남조선’을 해방시킴으로써 조국통일을 실현시킨다는 나름대

로의 이론적 배경을 지녔다. 그러므로 비동맹권에 「주체사상연구소조」 등을 만드는 것이 외교적 과제였다.

그러나 國際非同盟運動의 성격이 정치투쟁에서 경제발전에 의한 국가건설 — Nation-Building — 방향으로 선회됨으로써 비동맹권을 겨냥한 북한의 「주체외교」는 빛을 잃고 말았다.

한편,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소 등 공산권의 개혁·개방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주체사상」에 입각한 ‘조선식 사회주의’를 표방한 북한의 외교노선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였다. 북한은 “사회주의 나라중에는 큰 나라와 작은 나라는 있으나,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는 있을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개혁·개방압력을 거부하고 있으나, 「國際革命力量強化」의 궁극적 목적이 군사·경제협조관계의 유지에 있음을 감안할 때,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글라스노스트, 특히 소연방 해체 이후 북한의 對蘇外交는 사실상 파탄상태에 이르렀다. 북한측의 주장대로 1961년 「朝蘇우호협조 상호원조조약」에 따른 군사동맹관계는 명

목상의 유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파탄상태에 이르렀으며, 아울러 소련경제의 붕괴와 더불어 북한의 對蘇經濟關係도 한계점에 이르렀다. 다만 경제개혁과 對外開放 경제정책을 추구하면서도 정치적 민주화만은 단호히 거부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주체사상은 이념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주체외교는 경제지원획득과 통일외교를 위하여 對日修交와 對美接近을 서두름으로써 주체외교의 기본명제인 ‘反帝自主化’를 스스로 정면부정, 논리적모순과 더불어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라. 「南朝鮮」革命

「주체사상」은 남북한관계에 적용될 경우 한마디로 「남조선」 혁명론이다. 「주체사상」의 주체개념은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말하며 “인류의 역사는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라는 것이다. 「남조선」은 ‘美帝의 植民地’이며, 동시

에 ‘軍事과쇼統治’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식민상태와 군사과쇼에서 벗어나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남조선혁명」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은 공산화통일로 가기 위한 中間過程이다.

김일성은 1955년 12월 28일 주체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문제의 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에서 주체문제가 지닌 대남혁명전략적 성격을 명시하였다. 즉, 민족통일을 위해서는 군사적방법과 평화적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평화적 방법을 설명하면서 1948년 4월 19일 金九선생의 남북협상사례를 예증하고 있다. “상해임시정부 시절에 만난 공산주의자는 전부 몹쓸 사람들이었는데, 이번에 북한에 와서 만난 공산주의자는 믿을 만한 사람이며, 김일성장군의 건국사업을 돕기 위해 평양에 잔류하고 싶으나, 남쪽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남쪽인민이 김일성장군을 오해할까봐 이번에는 서울로 돌아가되 늡으면 다시

평양으로 돌아와 장군님의 품에 안기려 하니 그때 사과나무밭이라도 달라.”고 金九선생이 부탁하더라고 하면서, “남쪽에 金九선생과 같은 사람이 많이 나와야 민족통일이 가능하며, 이렇게 남쪽인민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주체」문제가 제기된다.”는 취지이다. 평생을 민족독립운동에 몸바친 민족의 지도자 金九선생을 格下시킴으로써 金九선생의 정치적위상을 格上시키려는 야비한 술책이기도 하지만 주체문제가 지닌 對南戰略의 속성을 솔직히 밝힌 것이며, 북한은 최근 남북협상 당시 金九선생과 金日성과의 만남의 한장소인 「쑤섬」을 혁명사적지화하여 對南革命戰略의 기본 방향을 밝히는 「통일전선탑」을 세웠다.

그런데 「주체사상」은 대남전략에의 적용과정에서 ‘민족주의적인 것’으로 변신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서」에서 비록 서울의 이후락, 평양의 김영주명의로 되었지만 남북분단사상 처음으로 합의된 통일 3원칙에 「민족대단결」이 명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1980년 제 6 차 노동당대

회 김일성 연설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제기한 이래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연방제로 통일하자고 하면서, 북한의 이론진은 민족개념을 앞세웠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한대로 동구공산권의 붕괴와 소련공산통치종식후 1991년 8월 1일의 김일성담화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에서 김일성은 공산주의자, 국제주의자임과 더불어 민족주의자임을 자처하면서 계급개념보다 민족개념의 상위를 공개적으로 표방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이 김일성은 오늘날 ‘民族大團結’을 외치고 있으나, 민족대단결은 구체적으로 민족통일을 위한 대단결을 말하며, 남북한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그대로 둔 연방제통일을 표방하고 있으나, 김일성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민족대단결, 민족통일개념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민족자주화 통일 즉, 공산화통일을 말한다.

그런데 김일성이 공산화통일이 아니라 민족대단결, 민족자주화 등 민족주의 개념을 통일문제와 결부시켜 부각시킴으로써 과거 식민지경험의

역사적 유산 때문에 민족주의적 성향이 지식인의 의식을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남한사회에서 對南 心理戰的 效果를 특특히 나타내고 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통일문제와 밀착되어 있는 민족주의의 실체를 정확히 재정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족주의는 근대주권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국가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西歐 民族主義로부터 인류역사에 등장하였으며, 서구 민족주의는 자본주의제도와 결탁하면서 자원공급원과 시장확대를 위한 식민지쟁탈전으로 나타나, 마침내 레닌이 말하는 帝國主義로 발전하였다. 이에 반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후진지역 민족주의는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나려는 ‘抵抗民族主義’의 속성을 지니게 되었으며, 우리 민족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적 독립을 쟁취하고 국가발전을 최대목표로 지향하여야 할 발전도상국에서의 現代民族主義의 성격은 저항민족주의적 속성만을 고집하여서는 절대로 안된다. 강대국 등 외부세력을 무

조건 배격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자주성을 옹호하면서 국가발전을 위한 응분의 협조관계를 마땅히 유지해야 한다. 특히, 분단국 민족주의는 민족의 융성과 발전을 위한 최선의 국가체제가 공산주의인가, 자유민주주의인가 명백한 정세관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안된다.

5. 結 言 — 民族統一과 關聯하여 —

이상으로 「주체사상」의 형성과 전개과정, 이론체계 그리고 역할과 한계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주체사상」은 한마디로 북한체제의 생존과 발전논리이다. 아니 김일성·김정일의 생존논리이다. 누누이 밝힌 바와 같이 「주체사상」을 내세워 김일성독재체제, 神政體制를 확립하였으며, 김정일 세습후계체제를 정당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란 「人民大衆 主體論」을 내세워 노동력을 사실상 착취 경제건설을 하고 있으며, ‘自主外交’를 내세

위 중·소이념분쟁의 틈바귀에서 생존할 수 있었으며, ‘反美自主化, 反과소民主化’를 내세워 對南혁명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주체사상」이 이같은 체제유지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공산권 전반이 개혁·개방의 물결에 휘말리고, 급기야 동구 공산권이 붕괴되고 소련공산통치가 종막을 고하고 소연방이 해체되는 세기적 혁명상황하에서도 북한공산체제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 북한체제는 바로 이 「주체사상」때문에 體制的 限界性에 直面하고 있음을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를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다.”는 데서 출발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창시한 위대한 사상”이란 「김일성주의」 단계를 거치면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이르면 마치 ‘종교론’과 같은 엄청난 탈바꿈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사상」은 오늘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지닌 체제적 모순과 한계성을 궁극적으로 극복하지 못하였다.

한편, 1991년 남북한 유엔가입이 실현되고 특

히, 민족분단사상 처음으로 전반적 남북한관계를 기본적으로 규율하게 될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됨으로써 남북한 관계는 분명 평화정착과 교류·협력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이 새로운 남북한관계를 남북한체제간 平和共存關係의 초기단계로 보고, 이를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南北聯合」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나, 북한은 새로운 남북한 관계를 이룬바 「하나의 조선정책」의 연장선위에서 파악하고 있다. “남북한이 유엔에 들어갔다고 하여 「하나의 조선정책」이 변한것이 아니라”고 강변하며, 「남북합의서」 내용중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목을 유독히 강조하고 있다.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로 연방제 통일을 하자고 하면서, 「지역정부」에 외교권, 국방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나오므로 남북유엔가입이나 「남북합의서」 채택은 남북한이 「지역정부」자격으로 이루어졌다는 논리로 귀결되는 셈이다.

즉 「남북합의서」를 채택하였지만 연방제를 거쳐 공산화통일을 지향하는 북한의 정책과 궁극적으로 자유민주통일을 위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지향하는 우리의 통일정책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는 궁극적으로 체제선택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산체제가 붕괴됨으로써 한반도의 통일환경은 우리의 통일 정책수행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다.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측면에서만 흑백논리식으로 도식화한 공산주의 세계관은 본질적으로 오류를 범한 것이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여 이상사회를 건설한다는 새로운 체제이념으로 인류역사에 ‘화려하게 등장한’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를 대치시킬 수 있는 이념과 체제가 아님이 드러났다.

오늘날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체제가 붕괴되는 극한적 상황에서 생존을 위하여 「조선식 사회주의」를 외치면서 고전·분투하고 있으나, 남북한

사회개방과 교류·협력관계가 加速化될 경우 더욱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같이 하여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북한사회체제의 변화가 일어나는 날이 바로 民族統一의 날이며, 우리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의 自由民主主義와 資本主義經濟體制를 더욱 알뜰히 다듬고 가꾸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일성 : 사상사업으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선집 I pp.560~585.
- (2) 노동신문논설 : 자주성을 옹호하자. 노동신문. 1966. 8. 12.
- (3) 김정일 : 주체사상에 대하여. 조선중앙년감. 1983. pp.124~159.
- (4) 김일성 : 조선노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 원자료로 본 북한 1945~1988. 동아일보. p. 386.
- (5) 김정일 :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근로자. 1987. 제 7 호.
- (6) 김정일 : 반제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근로자. 1988. 제 9 호.
- (7) 김일성 :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노동신문. 1991. 8. 5.
- (8) 김갑철 · 고성준 : 주체사상과 북한사회주의

- (9) 신일철 :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 (10) 이상우 : 북한의 주체사상
- (11) 박한식편 : 북한의 실상과 전망
- (12) 이정수 : 북한정치체제에 관한 연구

北韓의 主體思想 (통일총서 / 6)

1989年 1月 30日 初版發行

1992年 2月 25日 4版發行

發行處：統一研修院

서울特別市 道峰區 水躡2洞 山73-13

電話：901-7123~4

(통연 92-2-11)

